

# 물가 상승률 1%·경제활동참가율 65%… 나라살림 지켰다

기재부, 경제성과 점검 자료 발표  
가계부채비율 하락세 유지 등 강조  
글로벌 복합위기 충격 최소화 평가

기획재정부는 11일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는 전 세계 복합위기 속에서 충격을 최소화한 데다,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대외 신인도 제고에 속도를 냈다고 밝혔다. 특히, 물가안정 및 건전재정, 고용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보였다고 자평했다.

윤 정부 임기가 2년6개월을 지나 후반기로 접어든 이날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성과 점검' 자료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현 경제팀이 ▲글로벌 복합위기 충격 최소화 ▲경제 펀더멘털 및 신인도 제고 ▲경제협력 및 지속가능성 증진 등 3개 부문을 중심으로 정책적 역량을 쏟았다고 했다. 또 이러한 정책 대응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경제성과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까지 내려온 점을 부각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 속에서 출범한 윤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물가부담 완화를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윤 정부가 출범한 첫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후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2%대로 떨어졌고, 최근 두 달간은 1%대의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비슷한 시기 미국 2.4%, 영국 2.6%, 유럽연합(EU) 2.1% 등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치인 4.4%를 크게 밑돌고 있다.

정부는 향후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을 시 2% 이내 물가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동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 등을 추진했다고 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윤 정부 들어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15세 이상 고용률과 65%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성과로 내세웠다. 이

전 정부와 비교하면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각각 3%포인트(p), 4%p 올랐다.

다만, 지표상으로 2021년 3월 이후 4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해, 29세 이하 청년층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가 15만 명가량 줄어든 점도 향후 개선과제로 꼽힌다. 또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

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정부는 올해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쉬었음 청년인구는 전년대비 10만 명 안팎으로 늘어났다.

또 건설업과 도·소매업 부문의 고용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점도 임기 후반부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주요 성과에는 또 가계부채비율이 지난 2022년 감소세로 전환했고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출범 이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8년 86.8%, 2019년 89.6%, 2020년 97.1%, 2021년 98.7% 등 오름세를 나타낸 바 있다. 3년 연속 20조 원 이상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처음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줄이며 재정준칙을 지킨 것도 주요 성과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초를 고수하며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677조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채무는 올해 GDP 대비 47.4% 수준에서 내년에는 48.3%로 0.9%p 올라갔지만, 이전 정부에서 5~6%p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적은 규모라는 설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尹 “후반기 정책, 소득·교육 등 양극화 문제 해소 집중”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

“세세하게 서민의 삶 챙기겠다는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하게 세세하게 서민의 삶을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진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임기 절반을 마쳤다. 집권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의 ‘양극화 타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늘 국민 편에 있겠다고 말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는 수출, 투자, 고용 등 거시적으로 시장

경제의 체력, 기반을 마련한만큼, 후반기에는 미시적으로 국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기회를 얻고 희망을 가지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라며 “양극화 해소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생 물가를 잡는 방법,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사안이 될 수 있다”며 “다음 달 초 예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이벤트도 그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직을 새로 꾸리거나 재정 정책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며 구체화되면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고 했다.

다만 ‘전향적’이라는 표현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이 어느 수준으로 어떤 계층을 타깃으로 들어갈 지 등에서 구체적인 사안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전향적’은 꼭 재정만 뜻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분을 타깃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체감할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미도 된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양극화 타개’가 ‘4+1(교육·의료·연금·노동, 그리고 저출생 대책) 개혁’과 같은 선상으로 굵직한 국정 과제인지에 대한 질문에 “4+1 개혁안과 중복되는 것도 있고, 지방 정주여건이나 교육, 의료개혁 이런 것들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라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곧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

공정위

“과징금 1조 이상 부과”

5800건 시장 반칙행위 적발·제재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2년 6개월간 총 5800건 이상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해 제재하고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 분야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년 반 동안 플랫폼·통신·사교육·의약품·게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와 반도체·건설 등 주력산업 분야 위주로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 155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성과가 국민과 기업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에 대한 신속·효과적 대응’(공정거래법 개정),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별도관리 의무부여,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문화콘텐츠 등 우리 경제 지속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미래·신산업 분야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대기업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민생활 밀접 분야 부당 내부거래 등 법 위반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최상목 총리 “바위처럼 단단한 韓-美 경제협력 관계 유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적극 대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분야별로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

하고 트럼프 당선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 시장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분야별 대응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외환 및 거시경제 측면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정책 기조 변화를 점쳤다. 이와 관련해,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갈

이했다.

한편,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및 한국 국채의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따른 국내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분야별 대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한 비상설 회의체이다. 올해 4월 이후 총 6차례에 회의를 통해 중동사태 분석, 미국의 대 중국 관세 인상, 일본 신임내각과의 경제협력 방향 등이 논의됐다.

/세종=김연세 기자